



■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천성순 위원장

과학기술 정책 다원화 과학기술 발전에 걸림돌

- 대담 : 李光榮 (전북대 초빙교수 /본지 편집위원)
- 일시 : 7월 19일 오후 3시 ■ 장소 : 위원장실

■ ■

신정부 출범과 더불어 정부는 과학기술 투자의 효율화를 높이고 이를 통해 국가의 과학기술 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방안을 여러 가지로 마련하였다. 이 중에서도 특히 다원화되고 있는 과학기술 행정의 효과적인 조정에 대한 중요성이 인식되었다. 이에 본지는 제6기 과학기술자문회의 위원장으로 취임한 천성순(千性淳) 위원장을 만나 취임 포부와 한국 과학기술 발전에 대한 다양한 제언을 들어보았다.

■ ■

■ 바쁘신 가운데 「과학과 기술」지를 위해 시간을 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소 늦었지만 제6기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위원장 취임을 축하드립니다.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는 한국 과학기술의 정책 및 행정에 있어 중추적 업무를 담당하는 기관입니다. 위원장이 되신 소감과 포부에 대해 말씀해 주셨으면 합니다.

위원장으로 내정되었다는 소식을 갑자기 듣게 되어 처음에는 다소 당황했습니다만, 차츰 우리나라 과학기술계

의 발전에 큰 몫을 담당하는 자문회의 위원장직을 맡게 되었다는 점에서 무거운 책임감을 느꼈습니다.

앞으로 한국 과학기술계를 이끌기 위한 여러 가지 방안을 검토 중에 있습니다. 많은 사람의 의견을 듣고 이를 연구하여 실제적으로 어떻게 하면 과학기술계에 도움이 될 수 있을지를 다각도로 고찰하여 시행할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 위원장께서는 재료공학분야에서 많은 연구업적을 남기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한국과학기술원 원장과 국립 대전산업대 총장 등을 역임하시면서 우리나라의 과학기술 발전을 위한 여러 가지 생각을 갖고 계신 것으로 압니다. 지금 우리나라 과학기술계가 당면한 문제는 무엇이라 보시지요.

과학자들의 속성 때문인지 과학기술계가 단일 목소리를 내지 못하는 것을 꼽을 수 있습니다.

그것은 서로 자기의 주장만을 고집하고 있어 다른 의견을 귀담아 듣는 유연성이 부족하기 때문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 우리나라는 부처별 과학기술 정책은 있어도 국가차원의 과학기술 정책이 없다는 이야기를 자주 듣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는지요.

정책 예산배분 과학기술부 주축으로

정책이 지나치게 다원화되는 것이 그 원인이라고 봅니다. 전에는 과학기술 정책을 과학기술부(당시 : 과학기술처)가 모두 맡아서 했기 때문에 과

학기술부가 주축이 되어 국가의 과학기술 정책을 마련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근래에는 과학기술의 비중이 커지면서 각 부처가 자기 나름의 과학기술 정책을 내놓고 있는 형편입니다. 예를 들어 IT산업만 보더라도 정통부와 산자부 그리고 과학기술부가 조금씩 다른 정책을 내놓습니다.

부처간에 경쟁적으로 관련 과학기술을 발전시키겠다는 것은 어떤 의미에서는 장점도 있을 수 있지만 한정된 재원으로 효율성을 높이려면 이와 같은 일들이 총괄적으로 조정되어야 할 것입니다. 제가 생각하기엔 과학기술부가 있는 한 국가의 과학기술 정책 마련은 물론 모든 R&D 예산배분도 과학기술부가 주축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무엇보다 국가과학기술위원회가 필요한 것도 그러한 이유에서입니다.

■ 당초 연구기관의 효율성을 높이지는 의도로 현재 정부출연연구기관이 총리실 산하에 들어가게 됐습니다. 그러나 애초의 의도와는 달리 많은 문제가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 여러 곳에서 의견을 들었습니다. 연합이사회 이사장은 말만 이사장이지 예산과 인사권을 행사할 수 없는 입장인 것 같고 연구소의 소장들은 자기 연구원을 적극적으로 지원해주는 부처가 없어 아쉬워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가까운 시일 안에 이 문제에 대해 대통령께 정부 출연연구소의 활성화 방안을 말씀드릴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하지만 과학기술계도 이 문제에 대해서 일정한 책임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정부 출연연구기관이 총리실 산하로 들어간 것은 일부 과학기술계 인사들이 이를 적극적으로 추천하여 이루어진 것이기 때문입니다.

■ 우리나라 과학기술 발전을 위해 우선해야 될 일이 있다면 무엇이라 보시지요.

무엇보다도 출연연구기관이 창설되던 때의 초심(初心)으로 돌아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즉 70년대 초 유치 과학자들이 고국에 돌아와 밤낮을 가리지 않고 연구에 몰두하던 시대로 돌아가자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정부의 지원이 뒷받침되어야 합니다. 70년대 초 우리의 연구원들은 정부로부터 많은 지원을 받아 국가에 대한 소명의식과 긍지를 갖고 연구에 임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수한 해외 한국인 과학기술자들이 속속 국내 연구기관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상황이 그렇지 않습니다. 과학기술자들은 대학교수나 공무원이 받는 연금혜택을 받을 수 없습니다. 여러 가지 혜택도 없이 61세에 연구를 그만두어야 하는 조건 하에서 과연 우수한 과학기술자가 얼마나 출연연구소를 지원할지가 의문입니다.

■ 출연연구기관 이야기가 나와서 생각나는 것이 연구기관의 행정요원을 우선해서 퇴출시키는 문제입니다. 연구기관의 행정요원도 전문적일 뿐 아니라 연구기관의 활성화를 위해 꼭 필요한 인원입니다. 미국과 같은 경우 특히 홍보요원의 활동이 돋보입니다. 해외의 경우 홍보요원은 기관장과 밀접한 관계를 갖고 이사회를 비롯해서 모든 중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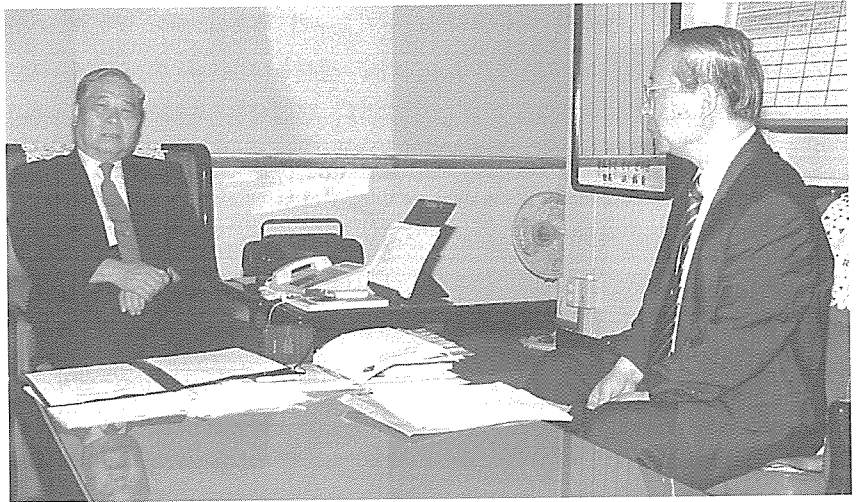
한 모임에 참가합니다. 그래야만 홍보를 바로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경우 홍보요원의 활용이 미약합니다.

미국의 경우 연구기관에서도 연구비의 일정 비율을 홍보비로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미국이 이 같이 홍보비에 투자를 하는 것은 그만큼 홍보가 중요하기 때문일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나라의 경우 홍보활동은 미약하기만 합니다. 정치계에 있는 분들과 이야기 할 때 느끼는 것입니다. 만 의외로 많은 정치인들이 KIST(한국과학기술연구원)와 KAIST(한국과학기술원)를 구분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홍보가 제대로 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역대 대통령 가운데 김대중대통령만큼 실질적인 과학기술 예산을 파격적으로 올려준 분이 없습니다. 김대통령은 정부 일반회계 예산에서 차지하는 과학기술 예산의 비중을 1998년 3.6%에서 현재 4.4%로 올려놓았을 뿐 아니라 임기 내 5%선으로 끌어올리겠다고 천명한 바 있습니다. 그럼에도 홍보가 부족하여 과학기술계 사람들조차 이에 대해 잘 모르고 있는 실정을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신중하게 검토해 볼 사항이라고 생각합니다.

■ 과학기술 발전을 위해 과학기술 교육의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잘 알려져 있듯이 지금 우리나라의 과학기술 교육은 많은 문제점이 있습니다. 이 부문에 대한 견해를 듣고 싶습니다.

대학수학능력시험 응시생 중 인문계 응시자는 늘고 자연계 응시자는 크게



千性淳위원장(왼쪽)이 과학기술 발전에 대해 李光榮 본지 편집위원과 대담하고 있다.

줄어 들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자연계 지망생이 1998년 42.2%에서 2001년 29.5%로 떨어졌을 정도입니다. 자연계는 인문계보다 공부하기가 어려워 학업성취율이 낮습니다.

때문에 열심히 공부하지 않으면 원하는 성적을 얻을 수 없습니다. 그러나 공부를 그렇게 많이 했어도 실제로 박찬호와 박세리와 같은 스타가 탄생하지 못합니다. 과학기술계에 스타가 될 만한 인재가 없어서가 아니라, 스타가 될 만한 재목이 많은데도 이에 대해 전혀 홍보가 되지 않아서입니다. 이러한 홍보 부족으로 수험생들이 자연계를 외면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나라 대학의 경우 자연계가 국립대에 50여개, 사립대에 1백40여개 됩니다만 교육내용과 교육시설이 선진국에 비해 크게 떨어져 있습니다. 특히 교수와 학생 대비 면에서는 선진국을 따라가기가 요원한 형편입니다. 기업은 제품에 대해 품질 보증을 하는데 대학은 학생들의 질적 수준은 관계없이 졸업만 시키면 그만이라고 생각

하고 있다하여 일각의 비판을 받기도 하는데, 정당한 주장이라고 생각합니다. 정부에서 이공계 교육정책에 대한 특별한 생각을 가지고 있어야 할 것입니다. 적어도 10~20년 후 필요한 특수분야의 과학기술계 인재는 정부가 책임을 지고 길러내려고 하는 특단의 조치가 시행되어야 합니다. 지금과 같은 상황이 계속되면 가까운 미래에는 오늘날 미국의 현실에서 볼 수 있듯이 우리나라도 과학기술계 인력을 외국에서 수입하지 않으면 안 되는 시대가 올 것입니다.

■ 우리나라는 과학기술 발전이라고 하면 하드웨어적인 면을 지나치게 강조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과거 정부는 연구소를 짓고 우수 기자재를 설치하는데 많은 지원을 했습니다. 그러나 연구인력을 확보하고 제대로 일을 할 수 있도록 연구비를 지원하는 일에는 인색했습니다. 이로써 비효율과 낭비라는 결과를 낳기도 했습니다. 특히 이 문제는 정부 출연연구기관이 안고 있는 가장 고질적인 병이라 봅니다. 어떻게 보시

는지요.

연구소는 시대상황에 맞는 역할해야

이에 대해서도 사실 정부만을 탓할 것이 아니라 연구기관 운영 자체의 문제를 따져 보아야 할 것입니다. 연구소는 동일한 역할과 모습으로 존재해서는 안됩니다. 70년대라면 그에 맞게, 8~90년대는 또 변화해 가는 시대 상황에 맞게 역할과 모습이 바뀌어야 합니다. 하지만 우리의 출연연구기관들은 시대상황에 대해 적절히 대비하지 못했습니다.

오늘날의 현실로 미루어보자면 출연 연구기관은 10~20년을 내다본 기초와 미래산업분야에 힘을 쏟을 때라고 봅니다. 그리고 이와 같은 분야는 정부가 전적으로 100% 재정지원을 해주되 기업이 할 수 있는 분야는 기업이 담당할 수 있도록 과감한 정책을 펴야 할 것입니다.

■ 국가 과학기술이 제대로 발전하려면 국민적인 지지가 따라야 할 것입니다. 10여년 전만 해도 과학자가 되겠다는 것이 초등학생들의 장래 희망 1, 2순위를 가리켰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연예인과 체육인이 1, 2위를 달리고 있습니다. 이런 풍토에서 우수 인력이 과학기술쪽으로 돌아올 가능성은 날로 떨어지고 있습니다. 이런 면에서 국민의 과학풍토 조성사업은 대단히 중요하다고 보는데.

국민들에게 과학을 친밀하고 가깝게 느끼게 하여 과학에 관심을 갖도록 하는 과학풍토 조성은 대단히 중요하다고 봅니다. 앞서 설명했듯이 우수한 인재가 과학기술을 외면하는 것은 국

민 전체가 과학에 대한 이해가 부족한 때문이라 봅니다. 지금 김영환 과학기술부 장관께서 과학기술자들이 신명나게 일할 수 있는 풍토를 만들겠다고 동분서주하고 있는데 좋은 결과를 맺어 국민들이 과학에 좀더 관심을 기울이고 애정을 쏟을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는 우리나라 과학기술 발전을 위한 전반적인 문제에 대해 대통령께 자문하는 기능을 갖고 있습니다. 이것은 듣기에 따라서는 최고 통치자에게 직접 과학기술 발전을 위해 국가가 해야 할 몫을 직접 진술한다는 점에서 정책발전에 큰 영향을 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다른 한편으로는 단순한 자문기능만을 갖고 있기 때문에 대통령의 과학기술에 대한 관심에 따라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의 역할이 좌우된다는 점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특히 우리의 경우 대통령이 주재하는 국가과학기술위원회가 따로 있어 이런 면에서도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의 역할은 한정될 수밖에 없다고 봅니다만.

국가과학기술위원회는 과학기술 관련 주요정책·연구개발계획과 사업을 조정하고 예산의 효율적인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는 기능을 수행하는 반면,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는 국가 과학기술 정책의 발전 방향과 각종 제도의 발전에 관한 사항 등을 대통령에게 자문하는 기능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이런 측면에서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는 과학기술을 다루는 모든 부처를 도와 행정부에서 말할 수 없는 사항을

대통령에게 알림으로써 과학기술계 일을 제대로 할 수 있도록 돕는 일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봅니다.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가 이런 자세로 일을 한다면 본래의 설립 취지를 바로 실천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를 위해서 크게 두가지 일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먼저 여러 부처가 관여하는 대형 과학기술사업을 대통령에게 건의함으로써 국가적인 대형사업이 잘 추진되도록 도움을 주는 것이고 다음은 현실적인 부분을 있는 그대로 보고함으로써 대통령이 상황을 정확히 파악할 수 있도록 돕는 것입니다. 과학기술의 발전은 최고 통치자의 관심과 결단이 대단히 중요하다고 봅니다. 가능하면 자주 대통령을 뵈고 과학기술 발전을 위해 적극 자문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끝으로 과학기술계에 당부하고 싶은 말씀이 있다면.

현재 우리 과학기술계가 안고 있는 문제가 여럿 있지만, 이의 해결을 위해서는 무엇보다 먼저 우리 자신을 되돌아봐야 한다고 봅니다. 그러한 문제가 발생하기까지의 책임은 일부분이 과학기술계에 종사하는 우리들에게 있다고 생각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과학기술계는 서로서로 이해하고 도와주는 풍토가 조성되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과학기술자들이 70년대 연구실에서 밤늦도록 땀 흘리며 연구에 몰두하던 때의 열정을 회복하여 우리나라 과학기술계가 크게 발전하도록 모든 과학기술계 인사들은 꼭! 꼭! 단결해야 합니다. ①7